

# 新資料에 의한 4·3事件의 實際

鄭 錫 均

(전 국방군사연구소 선임연구원)

1. 서 론
2. 南勞黨 濟州島委員會의 창설과정과 활동
3. 南勞黨 濟州島委員會의 '3·1記念鬪爭' 指導
4. 南勞黨의 組織擴大와 '2·7總罷業' 指導
5. 南勞黨의 武裝蜂起 計劃樹立과 濟州4·3事件의 發生
6. 南勞黨의 '5·10 總選舉 反對鬪爭' 指導
7. 南勞黨의 軍內 浸透와 聯隊長 暗殺
8. 海州 南朝鮮人民代表者大會와 金達三의 演說
9. 결 론

## 1. 서 론

올해는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주도하에 봉기한 무장세력들이 경찰관서를 습격·파괴하고, 경찰관과 양민을 살상함으로써 촉발된 이른바 '제주4·3사건'이 발생한지 54주년이 되는 해이다

돌이켜보면 해방 이후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우리 현대사에는 유난히 폭동과 반란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1946년 9월 23일 서울 철도공작장을 비롯한 전국철도노조원의 총파업, 1946년 10월 1일 대구폭동사건, 1948년 4월 3일 제주폭동사건, 그 해 10월과 11월에 발생한 여수·순천 및 대구 반란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진압 후에도 폭동가담자들은 산악지역을 이용한 공비활동으로 신생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였다.

이와 같은 연쇄적인 폭동과 반란사건은 해방직후 사회혼란기를 틈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남로당 등 좌익세력들이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민중을 선동하여 일으킨 사건이었으나 50여 년의 세월이 경과하면서 이들 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요구되면서 당시 사건 실체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사료 발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 등 구 공산권 국가와 미국에서 비밀해제된 자료들이 새롭게 발견됨으로써 이러한 역사적 진실에 더욱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자료로는 러시아 자료로 러시아 외무성의 『남조선 국내 정세 보고서』가 있으며, 미국 자료로 미제24군단·미제6사단·미제7사단·주한미군사고문단의 『정보일지(G-2 Periodic Report)』와 『주간정보요약(G-2 Weekly Summary)』, 미 방첩대(CIC)의 『월간정보보고서(Monthly Information Report)』·『주간첩보공보(Weekly Information Bulletin)』·『반월간상황보고(semi-monthly Situation Report)』, 『미국의 대외관계(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주한미군사(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주간합동분석(JOINT WEEKA)』, 『미군정활동보고서(Summation of U.S.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미군정청의 제주도 관련 문서 등이 있다. 러시아 자료는 제주 4·3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해방 직후 한반도내 좌우익 대립 등 전반적인 정치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 자료는 4·3 사건 발발 시점이 미군정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

는 자료로써 미군정이 지향한 제주도의 정치형태, 미군정과 제주도 좌익단체와의 관계, 미군정과 군·경의 관계,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반미 폭력투쟁 등을 규명하는 데 기본자료가 된다. 특히 미 제24군단과 미 제6·제7사단 『G-2보고서』, 제주도 군정부대였던 제59군정중대의 『제59군정중대부대사(59th M.G. Co. Unit History)』는 제주4·3사건과 미군정의 역할을 밝힐 수 있는 자료이다.

둘째, 국내자료로는 행정부와 국회 관련자료, 군 관련자료, 경찰 관련자료, 사건 관련자들의 저서, 각종 신문·잡지 등이 있다. 행정부와 국회 관련 자료로는 1948~1949년도 『국무회의록(1회~109회)』·『제헌국회속기록(1회~6회)』등이 있는데, 제주4·3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책 마련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군 관련 자료로는 『국방부 일반명령철(1949~1950)』·『통위부 특명철(1948)』·『육본일반명령(1949~1950)』·『육군역사일지(1945~1950)』·『장교자력표』·『참전자 증언록』 등이 있는데, 특히 진압작전에 참가한 국방경비대 제9연대, 제11연대, 제2연대의 작전관련 문서와 『제2연대 제주도 주둔기』와 같은 陣中日記는 당시 군 작전의 실상을 밝히는데 도움을 준다. 『제2연대 제주도 주둔기』에는 군의 선무공작 관련 뼈라와 남로당 중앙에서 파견한 인물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고등군법회의 수형인 명부(1948. 12~1949. 7)』와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재판 판결문(1948. 12)』에는 당시 폭동에 가담하였다가 체포된 사람들의 숫자 및 죄명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경찰측 자료로는 4·3사건 당시 경찰이 압수한 『濟州道人民遊擊隊鬪爭報告書(1948. 8. 경찰 압수품 사본)』와 『3·1기념행사의 진상보고(포고령 위반 혐의자 김완배 압수품 제23호)』, 각종 뼈라 및 대자보 등이 있다. 이중에 특히 『濟州道人民遊擊隊鬪爭報告書(1948. 8. 경찰 압수품 사본)』는 1948년 3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인민유격대의 상황을 조직, 작전, 투쟁 등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날짜별로 수록하고 있어서 인민유격대의 조직 및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4·3사건 발발 전후의 인민유격대의 조직 및 활동상을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자료로 매우 구체적인 기록들을 포함하고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건 관련자의 저서로는 당시 경찰로 근무했던 高在祐의 『濟州4·3暴動의 眞相은 이렇다』, 국방경비대 9연대장이었던 金益烈의 『4·3의 진실』,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 결성 당시 문화부장을 지낸 金奉鉉의 『濟州島人民들의 4·3武裝鬪爭史』·『濟州島 血의 歷史』 등이 있다.

이밖에 당시에 발간된 각종 신문과 잡지 등이 4·3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에는 제주도의 지역신문인 『濟州新報』는 물론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 그리고 남로당 기관지인 『노력인민』 잡지 『신천지』 등 실로 다양한 신문·잡지 등이 포함된다.

제주4·3사건은 해방 후 좌·우익의 정치세력이 대립하는 복잡한 정치·사회 환경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건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남한에서 실질적인 정부기능을 수행했던 미군정의 정책과 활동, 그리고 해방 후 일련의 폭동과 반란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던 남로당의 투쟁 전략과 전술 등에 관한 자료이다.

그동안 이들 자료 중 상당수가 미공개되어 4·3사건의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앞에서 언급한 많은 자료들이 비밀해제 되거나 새롭게 발굴되어 사건의 진실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주4·3사건 발생 원인과 전개과정 등 사건 實際가 무엇인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 2. 南勞黨 濟州島委員會의 창설과정과 활동

南勞黨 濟州島委員會의 공식 명칭은 ‘南勞黨 全南道黨部 濟州島委員會’이

며, 그 뿌리는 '朝鮮共產黨 濟州島委員會'에 두고 있다.<sup>1)</sup> 조선공산당 제주도위원회는 1924년 제4차 조선공산당사건으로 투옥된 바 있는 金正魯<sup>2)</sup> 주도하에 1945년 12월 9일 제주읍의 한 民家에서 창설되었다. 주요 당원들은 대부분 일제하 사회주의운동 경험을 지닌 인물들이었으며, 당원 확충은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졌다.<sup>3)</sup> 제주도 조선공산당원들은 제주도 人民委員會의 주요 직책을 겸하면서 인민위원회 활동에 주력하였다. 미군정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전까지 인민위원회는 제주도의 행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는데,<sup>4)</sup> 그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조선공산당원들이었던 것이다.

1946년 11월 23일 서울에서 朝鮮共產黨·朝鮮人民黨·南朝鮮新民黨 등 3개 좌익 정당이 통합하여 南朝鮮勞動黨이 되자, 당시 제주도의 유일한 좌익 정당이었던 조선공산당 제주도위원회도 1946년 12월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다.<sup>5)</sup>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조직 책임자로는 위원장에 安世勳,<sup>6)</sup> 부위원장에 李辛祐<sup>7)</sup>를 비롯하여 趙夢九,<sup>8)</sup> 金容海,<sup>9)</sup> 金塗煥,<sup>10)</sup>

- 1) 이하 '남로당 전남도당부 제주도위원회'는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로 표기함.
- 2) 김정로는 1907년 제주읍에서 출생하였다. 1928년 제주도 야체이카사건으로 일제의 검거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일본에서 체포되어 6개월형을 살았다. 석방된 이후에는 목포에서 생활하다가 해방을 맞이하였다. 김정로는 전남 목포에서 건국준비위원회 결성에 참여한 후 건준 조직의 임무를 띠고 제주도로 들어와 제주도 건준의 결성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 3) 金奉鉉·金民株, 『濟州島人民들의 4·3武裝鬪爭史』, 1963, 文友社, 17쪽. 조선공산당 제주도위원회의 결성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조공 대정면책을 맡았던 李運芳의 경우는 9월 하순경에 조공 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운방의 증언).
- 4) 전라남도 미군정요원으로 근무했던 그랜트 미드(Grant E. Meade)는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당시 일본군 간섭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제주도에서 유일한 당이었고, 유일한 정부였다"고 회고하였다(Grant E.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New York, Columbia Univ., 1951, 162 쪽).
- 5) 文國柱, 『濟州島の四·三鬪爭』, 『朝鮮社會主義運動史事典』, 東京, 評論社.
- 6) 안세훈은 1891년 조천면(당시는 신좌면) 조천리에서 태어났다. 안요검과 안요해는 그의 또다른 이름이다. 1936년 조천리의 김시용, 김유환과 함께 공산주의 사상을 학습하여 사상범으로 징역 6개월을 살았다. 8·15 이후 보안대장을 지냈고 제주도 민주주의민족전선 공동의장으로 3·1대회를 주도하였다. 이후 서울로 도피하였다가 월북하여 해주 남조선

金閔煥,<sup>11)</sup> 玄好景,<sup>12)</sup> 吳大進,<sup>13)</sup> 金漢貞,<sup>14)</sup> 李運芳,<sup>15)</sup> 金正魯, 金澤銖,<sup>16)</sup> 文在珍,<sup>17)</sup> 夫秉勳,<sup>18)</sup> 宋泰三,<sup>19)</sup> 李道伯<sup>20)</sup> 등이었다.<sup>21)</sup>

- 인민대표자대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제주도 조직재건 사명을 띠고 남파되었으나 제주도로 내려가지 못하고 광주에서 활동하다가 1953년 휴전 무렵에 도피 도중 광주 부근 굴에서 사망하였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었다.
- 7) 1900년 대정면 하모리에서 출생하였다. 1932년 야체이카사건으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해방 이후 대정면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3·1사건으로 징역 6개월을 언도받았다. 이후 활동을 중지하였다가 1948년 10~11월 경 집앞에서 피살되었다.
  - 8) 남로당 초대 조직책임이었으며 안세훈 다음에 2대 도당위원장을 맡았다. 1951년 9월경 부산에서 체포되었다.
  - 9) 하귀출신으로 1926년경 일본 대판에서 노동야학을 이끌다가 해방되기 1년 전에 귀국하였다. 해방 후 제주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1948년 2월 이후 제주를 떠나 목포에서 활동하다가 잡혀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제주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이후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
  - 10) 조천면 출신으로 1931년 11월 조선공산당 제주도 야체이카 사건에 연루되어 2년간 복역하였다. 해방 후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위원장과 제주읍 인민위원회 대표를 지냈다. 아들·딸과 함께 월북하였다.
  - 11) 조천면 출신으로 해방 후 조천면 치안대장을 지냈으며, 1948년 당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선전부장을 맡았다. 4·3사건에 참여한 후 월북하였다.
  - 12) 성산 출신으로 교직원이었다. 안세훈과 더불어 민주주의 민족전선 제주도위원회 결성 당시 의장단에 포함되었으며, 1946년 쫓사건으로 체포된 유일한 사람이었다.
  - 13) 1898년 대정면 하모리 출신으로 1932년 '제건조선공산당 제주도 야체이카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한정, 이신호, 문달진 등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오대진의 지도하에 있었다. 해방 후 제주도 건국준비위원회 결성을 주도하여 건준과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1947년 2월경에 있었던 하귀회의에서 당활동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제명당하였다가 1949년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 14) 1894년 대정면 가파도 출신으로 1932년 야체이카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해방 후 인민위원회 보안대장을 맡았다가 1946년 10월 미군정의 검거를 피해 배를 타고 도피 중 삼천포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여 사망하였다.
  - 15) 1909년 대정면 모슬포 출신으로 일제 때 일본에서 7년 동안 노동운동을 하였으며, 해방 이후 대정면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 선전부장을 맡았다. 1946년 말 남로당 대정면 책으로 활동하다가 1947년 3·1기념대회 이후 검거되어 10개월형을 살았다. 4·3사건에 직접 참여하였다가 1948년 7월 제주를 떠나 일본으로 갔다가 1979년에 귀향하였다.
  - 16) 1925년 4월 '제주도 신인회 강령'이 문제가 되어 6개월형을 살았다. 1947년 47세의 나이로 제주민청위원장이 되었으나 이후 일본으로 밀항하여 1948년 2월 당에서 제명을 당했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창당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黨員倍加運動’을 전개하였다. 당시 남로당 대정면책을 맡았던 이운방은 “대정면의 경우 초기 당원수가 20~30명에 불과했으나 3·1절 집회를 앞둔 2개월 사이에 60~7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남로당의 당원배가운동은 民主主義民族戰線(이하 ‘민전’), 朝鮮民主靑年同盟(이하 ‘민청’), 婦女同盟 등 외곽조직 결성·확대와 맞물려 진행되었다.

민전 제주도위원회는 중앙의 민전 보다 약 1년이 늦은 1947년 2월 23일에 결성되었다. 중앙의 민전이 사상을 달리하는 각종 좌익 정당·사회단체의 통일전선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면, 제주도에서는 좌익들의 사상적 분열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단체들의 단순통합체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지하에서 활동하던 남로당원들은 합법적인 대중조직체의 성격을 지닌 민전에 적극 가담해 조직을 이끌면서 각종 투쟁을 배후에서 조종하였다. 따라서 민전 제주도위원회는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합법적인 투쟁위원회’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1947년 2월 26 일자 『濟州新報』에는 민전 제주도위원회 결성식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 2월 23일 오전 11시부터 도내 읍·면 대의원 각 사회단체 대표 등 315명, 방청객 200여 명 등이 참석하였다.
-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위원장 안세훈은 민전이 지향하는 바를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실천을 위하여 3 천만 동포의 한 사람까지라도 민전 산하에서

17) 제주 야체이카사건으로 징역 1년을 살았다. 해방 후 제주읍 청년동맹위원장을 맡다가 ‘쌀 사건’으로 체포령이 내려져 광주로 피신한 후 활동을 중지하였다.

18) 제주읍 출신으로 1937년 ‘사회주의운동 비밀결사회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살았다. 해방후 제주읍 화북리의 당책을 맡았으며, 1948년 2월 신춘회의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19) 1935년 직색농조에 관여했었고, 해방 후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서귀포 당책을 맡았다.

20)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거물로 서귀포에서 활동하면서 3·1투쟁을 주도하였다. 1950년 8월부터 서귀포 지역 토굴에서 본토와 접선을 시도하던 중 1954년 3월 15일 체포되었다.

21) 高在祐, 『濟州 4·3暴動의 眞相은 이렇다』, 백록출판사, 1998, 15쪽 ; 이운방, 『4·3항쟁에 관한 일고찰』, 『4·3장정』 3, 백산서당, 1990, 104쪽.

최후까지 투쟁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 민전 명예의장에 스탈린, 朴憲永, 金日成, 許憲, 金元鳳, 劉英俊을 추대하고 광주시 남로당 결성대회에 격려의 메시지를 보낼 것, 그리고 박헌영 체포령 취소와 10월 인민항쟁으로 말미암아 투옥된 열사를 즉시 석방하라는 항의문을 하지 중장에게 보낼 것을 결의하였다.
- 잠복상태에 있는 제주도 남로당이 하루바삐 합법적 출현을 기하라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 의장단에 안세훈, 李一鮮, 玄景昊, 부의장단에 김택수, 金容海, 金相勳, 吳昶旻, 집행위원에 김정로를 비롯해 33명이 선출되었다.<sup>22)</sup>

이와 같이 민전 제주도위원회는 인적 구성면에서나 활동 목표에 있어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와 매우 유사하였다.

한편 1947년 1월 12일 민청 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되고,<sup>23)</sup> 1~2월에 걸쳐 각 읍·면에도 민청이 결성되었다. 당시 중앙의 민청은 좌익단체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집단으로서 미군정과 우익단체에 대한 투쟁의 선봉대 역할을 담당하였다.<sup>24)</sup> 민청 제주도위원회 또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행동대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 각 읍·면 민청 결성과정을 살펴보면 다음〈표 1〉과 같다.

남로당 투쟁 선봉대인 민청 제주도위원회는 1947년 5월 22일 민청원에 대한 가택수색이 진행된 후 조직 명칭을 새롭게 바꾸었다.<sup>25)</sup> 이는 민청 중앙이 1947년 5월 16일 미군정청 행정명령 제2호<sup>26)</sup>에 의해 해산명령이 내려

22) 『濟州新報』, 1947. 2. 26.

23) 『濟州新報』, 1947. 1. 10. 민청의 조직 강령에 대해서는 民主主義民族戰線, 『朝鮮解放年報』, 民友印書館, 1946, 183~184쪽 참조.

24) 建國青年運動協議會, 『大韓民國建國青年運動史』, 1989, 224~225쪽.

25) 이와 관련하여 『제주신보』 1947년 5월 26일자에는 “去般 중앙에서는 행정법 제2호에 의해서 조선민주청년동맹에 대한 해산명령이 내렸다 하는데 본도에서도 지난 22일 夜를 기하고 민청원 가택수사를 단행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26) Hq. USAMGIK, Executive Order No. 2, 1947. 5. 16. 행정명령 제2호는 조선민주청년동맹의 등록 취소와 즉각 해산을 명령하고 있다.

<표 1> 조선민주청년동맹 제주도위원회

지 역	창설일	결 성 과 정
조천면	1947. 1. 25	1947년 1월 25일 조천국민학교에서 대의원 100명과 방청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식을 진행함. 의장단에 金元根, 金平遠, 金大珍, 金完培, 金義鳳 등 5명을 선출하고, 명예의장으로 박현영, 허현, 김일성, 趙喜永, 金澤錫를 추대함.
구좌면	1947. 1. 30	1947년 1월 30일 구좌면 세화리공회당에서 대의원 279명과 방청객 300여명이 모여 결성식을 진행함. 위원장에 吳達俊, 부위원장에 韓錫範을 추대함.
서귀면	1947. 2. 9	1947년 2월 9일 대의원과 방청객 600여명이 모여 결성식을 진행함. 박현영, 허현, 조희영, 김택수를 명예의장으로 추대하고 위원장에 宋泰三, 부위원장에 玄元鶴·許順位를 선출함.
한림면	1947. 2. 9	1947년 2월 9일 한림 동국민학교에서 대의원 350명과 방청객 300여명이 모여 결성식을 진행함. 박현영 외 4인을 명예의장으로 추대하고, 위원장에 金行敦, 부위원장에 朴行益·朴東孝, 상임위원 20여명을 선출함. 박현영 체포령 즉시 취소요구 진정서와 민주주의 애국자를 즉시 석방하라는 진정서를 하지 중장에게 보낼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함.
대정면	1947. 2. 10	1947년 2월 10일 대의원과 방청객 500여명이 모여 결성식을 진행함.
성산면	1947. 2. 13	1947년 2월 13일 성산면 罐詰工場에서 대의원 150명과 방청객 200여명이 모여 결성식을 진행함.
제주읍	1947. 2. 16	1947년 2월 16일 제주읍 조일구락부에서 대의원 300명과 방청객 200여명이 모여 결성식을 진행함. 박현영 외 4인을 명예의장으로 추대하고 위원장에 李昌旭, 부위원장에 高時珍, 상임위원 31명을 선출함. 박현영 체포령을 즉시 철회하라는 진정서를 하지 중장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 가결함.
남원면	1947. 2. 16	1947년 2월 16일 남원리 공회당에서 대의원 100명과 방청객 200여명이 모여 결성식을 진행함.
에월면	1947. 2. 22	1947년 2월 22일 신엄리 국민학교 강당에서 대의원 424명 방청객 1,500명이 모여 결성식을 진행함. 명예의장에 김일성, 박현영, 허현, 조희영, 김택수를 추대하고, 위원장에 張濟滢, 부위원장에 金弘奎·金承休를 선출함. 남로당 절대지지를 만장일치로 가결함.

자료 : 『제주신보』 1947. 1. 28 ; 1947. 2. 4 ; 1947. 2. 16 ; 1947. 2. 20 ; 1947. 2. 16 ; 1947. 2. 18 ; 1947. 2. 20 ; 1947. 2. 24.

진 후 6월 5일 朝鮮民主愛國青年同盟(이하 '민애청')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민청 제주도위원회는 민애청 제주도위원회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그러나 명칭만 변경된 것일 뿐 조직상 변화는 없었다. 민애청은 중학생까지도 조직원으로 포섭하여 세력을 확대하였으며, 민애청 조직원들이 이후 4·3사건이 발발하면 그 중심세력이 되는 소위 '濟州道人民遊擊隊(일명 人民解放軍)'의 핵심 근간을 이루게 된다

이밖에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영향력 하에 있던 좌익 단체로는 조선민주여성동맹 산하의 부녀동맹, 전국농민조합총연맹 산하의 농민위원회가 있었으며, 이들 단체들은 각 읍·면·리까지 광범위하게 조직되어 활동하였다.<sup>27)</sup>

### 3. 南勞黨 濟州島委員會의 '3·1記念鬪爭' 指導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위원장 안세훈)는 1947년 2월 17일에 3·1운동 28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反美·反 이승만투쟁을 벌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3·1記念鬪爭準備委員會'를 결성하였다.<sup>28)</sup> 이 위원회의 결성은 4·3사건과 관련해서 두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1947년 2월 23일에 결성된 민전 제주도위원회 모태가 되었으며, 둘째 이 위원회가 주도한 3·1투쟁이 4·3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이다.

3·1투쟁은 단지 제주도에에서만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다. 이 투쟁은 남로

27) 『濟州新報』, 1947. 1. 28 ; 1947. 1. 30 ; 1947. 2. 24. 조선민주여성동맹과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의 강령 및 당면입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민족전선, 『조선해방연보』, 166~167쪽, 178~181쪽 참조.

28) 『濟州新報』, 1947. 2. 18. 이 위원회는 위원장에 안세훈, 부위원장에 현경호·오창훈, 총무부에 김승문의 4명, 재정부에 김두훈의 4명, 선전선동부에 이일선의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濟州道警察局, 『濟州警察史』, 2000, 681쪽).

당 중앙의 지령에 의해 전국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폭동'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sup>29)</sup> 남로당 중앙에서는 "1946년 5월에 결렬된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를 촉진한다"는 미명아래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글을 신문지상에 기고하면서 투쟁을 적극 독려하였다.

"반역도당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통하여 조국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3상 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 실천하는 광범한 인민운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압도적 여론으로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속개하게 하고, 미소공동위원회가 모스크바 3상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실천하는 민주주의 정당과 사회단체만을 토대로 임시민주정부를 꼭 수립하고, 정권이 인민위원회에 넘어오게 하여 이 인민위원회가 북조선과 같은 민주개혁을 즉시 실천하게 함에 있다. 우리 남조선노동당은 여러분의 선두에서 용감히 투쟁함으로써 기필코 자유와 민주독립을 전취할 것을 맹세한다."<sup>30)</sup>

이러한 남로당 중앙의 투쟁노선에 따라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에서는 제주도내의 각 읍·면, 공장, 직장 세포 앞으로 투쟁 지령문을 하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1운동 기념투쟁에 관한 지시  
작년 9월 철도파업으로 시작된 전국산업의 대파업과 10·1 대구인민항쟁으로 시작된 남조선의 대항쟁은 계속되고 있다 ... 중략.
- 3·1 기념투쟁의 목표
  - ① 농촌, 직장을 막론하고 근로인민의 생활 확보
  - ② 삼상회의 결정의 충실한 실천만이 조선의 완전독립을 실현할 것이며, 그 결정의 구체화는 곧 미소공동위원회의 속개

29) 전국적으로 발생한 '3·1투쟁'에 대해서는 김남식, 『남로당연구』1, 돌베개, 1984, 275~278쪽 참조.

30) 『獨立新報』, 1947. 3. 1.

③ 우리들은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미군정과 타협해 우리 민주진영을 분열, 파괴, 약화시키는 기회주의자들에게 속지말고 인민투쟁의 피투성이 속에서 나온 남조선 노동당을 지지하고 그 지도하에 쉬지않는 투쟁을 전개해 우익이라 칭하는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숙청 해야만이 우리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 3·1기념투쟁의 방침

① 각 읍면에서는 인민위, 민에청, 부녀동맹, 기타 각종 단체 및 직장대표자들로 3·1기념준비위원회를 즉시 조직할 것. 준비위에 동원부, 선전선동부, 준비부를 둘 것. 학교에는 교직원과 학생대표로 조직하고 2월 24일까지 선전선동사업 및 동원 예상인원을 도준비위에 종합 보고 할 것.

②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각 읍면 부락 및 직장대회를 소집, 3·1시위 운동에 전원 참가할 것을 결의하고 반 및 직장단위로 동원 조직책임 지휘자 및 자위대 2~3인을 선정 보고할 것.

③ 당일 지휘자 및 자위대는 반 및 직장별로 동원시켜 시위행렬로 지정한 장소 시간에 집합시킬 것.

- 3·1 기념투쟁에 대한 표어

- ① 민주 애국 투사를 즉각 석방하라!
- ② 최고지도자 박헌영선생 체포령을 즉시 철회하라!
- ③ 정권은 즉시 인민위원회로 넘겨라!
- ④ 진보적 노동법령을 즉시 실시하라!
- ⑤ 학원의 민주화!
- ⑥ 근로인민은 남조선노동당 깃발 아래로!
- ⑦ 남녀평등 법령 즉시 실시하라!<sup>31)</sup>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투쟁 지령에 따라 민전 제주도위원회의 의장단은 1947년 2월 25일 제주도군정청에 집회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주도 미군

31) 高在祐, 『濟州 4·3暴動의 眞相은 이렇다』, 백록출판사, 1998, 21 ~22 쪽; 제주4·3연구소, 『제주항쟁』, 실천문화사, 1991, 161 ~181쪽.

정청 경찰고문관 패트릿치 대위를 만나 집회 허가를 요청하였다.<sup>32)</sup>

이에 대해 제주도군정장관 스타우드 소령은 “시위행렬은 절대 금지하며 행사는 濟州西飛行場에서 치를 것”을 권고하였다.<sup>33)</sup> 하지만 민전 제주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3월 1일을 기해 대대적인 기념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경찰이 민청 조천면 의장이었던 金完培<sup>34)</sup>로부터 압수한 「3·1記念行事의 真相報告書」에 의하면, 이날 투쟁에 참가한 인원은 25,000명 정도였으며 이중 남로당·민전·인민위원회·민청·부녀동맹 등 좌익단체에서 동원한 인원이 17,000명이었고 기타 군중이 8,000명이었다.<sup>35)</sup>

이날 집회에 참가한 시위군중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1947년 3월 2일자 미6사단 정보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47년 3월 1일 오전 10시 제주읍에서 약 1,000 여 명의 폭도가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열고 시가행진을 벌였다. 폭도들은 경찰서로 행진하여 14시 45분에 경찰서를 공격했다. 경찰은 폭도를 향해 발포했다 4 명의 민간인이 죽고, 숫자 미상의 민간인들이 다쳤다. 부상당한 폭도 가운데 1명이 나중에 사망했다. 경찰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미국인 희생자는 없었다. 미군은 군중해산을 지원했다. 제주경찰서장은 경무부에 100 명의 목포 특별경찰 파견을 요청했다. 그들은 3월 1일 17시에 파견되었다. 현재의 상황은 평온하지만 긴장되어 있다.”<sup>36)</sup>

32) 『濟州新報』, 1947. 2. 26.

33) 濟州道警察局, 『濟州警察史』, 2000, 682 쪽.

34) 북촌 출신으로 해방전까지 조천면사무소 측량계 직원이었다. 해방 이후 북촌리 인민위원회 선전부장을 맡았으며, 1946년 11월 이후부터 입산 전까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농민부장을 지냈다. 1947년 말에서 1948년 초 사이에 입산한 것으로 보이며, 남로당 조천면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1949년 7월 21일 최후 공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졌다.

35) 「3·1 記念行事의 真相報告(布告令 違反 嫌疑者 金完培 押收品 第23號)」, 濟州道警察局, 위의 책, 684쪽.

36)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474, 1947. 3. 2.

이 보고서에 의하면, 경찰의 발포에 의해 6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3·1사건은 '허가받지 않은 집회에 참석한 폭도들이 경찰서를 공격해서 어쩔 수 없이 발포하게 된' 것이었다. 당시 경찰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폭도를 선동하는 민중의 일부분이 있는 한, 그리고 집회 결사 자유의 미명아래 파괴를 목표로 하는 집단이 있는 한 엄중한 수단을 쓰지 않을 수 없으며, 아직까지도 이런 무질서한 상태가 계속됨은 건국을 위하여 통탄할 일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sup>37)</sup>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경찰의 발포로 인한 시위군중 사망사건을 계기로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준비하였다. 그 계획은 3·1투쟁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경찰이 金完培로부터 압수한 「3·1記念行事의 眞相報告書」에는 '남로당이 3·1투쟁에서 얻은 교훈'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계획성 있고 규율적이며 통제적인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
- 굳은 결심과 신념을 가져 見敵必殺의 강렬한 기세를 항상 집중 攻擊戰을 전개하여 적으로 하여금 반격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단기전에 끌려 군중에게 지리감과 권태감, 그리고 피로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
- 終戰에 임하다시피 왕성한 전투태세를 가지고 준동하면 언제든지 한다는 기세를 적에게 보여 완전히 적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
- 완전 終戰이 되기 전에 적을 업수이 보고 승리감에 빠져서는 아니된다는 것.
- 終戰後의 사태를 여러 가지로 예상 분석하고 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워두어야 한다는 것.<sup>38)</sup>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3·1사건의 대응책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산

37) 『漢城日報』, 1947. 3. 4.

38) 「3·1記念行事 眞相報告」.

하조직을 추가동시켰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당내 투쟁조직으로는 ‘3·1事件 對策鬪爭委員會(위원장 金龍寬<sup>39)</sup>’를, 당외 투쟁조직으로는 ‘3·1事件 對策委員會(위원장 洪淳容)’를 합법적으로 읍·면·리·구에 구성할 것”<sup>40)</sup>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3월 5일에 ‘濟州道 3·1事件 對策 南勞黨 鬪爭委員會’가, 그리고 3월 9일에 ‘濟州 3·1事件 對策委員會’가 각각 결성되었다.<sup>41)</sup>

또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1947년 3월 7일자로 각 읍·면 위원회에 ‘3·1사건 대책 투쟁에 대하여’라는 지령서를 하달하였다. 이 지령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 3월 1일 제주읍에서 일어난 발포살해 사건에 대하여 제주도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제주읍위원회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연석회의에서 대정면의 건의문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투쟁방침을 결정하는 동시에 ‘黨鬪委’를 구성하고 이 鬪委가 전체적 3·1사건 대책투쟁을 지도하기로 되었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지도부 5명, 조직부 5명, 선전부 10명, 구호부 3명, 조사부 5명
- 투쟁방침으로는 첫째 3·1투쟁방침의 연장으로서 당의 영웅적 대중투쟁을 통한 合法戰取, 둘째 美帝 및 反動陣營의 약체화에 대한 결정적·최후적 투쟁, 셋째 제2혁명 단계의 대중적 투쟁에 대한 완전한 사상적·무력적 준비
- 요구조건은 첫째 발포책임자 姜東孝 경찰서장 및 발포경찰을 즉시 살인죄로 처단하라, 둘째 경찰의 수뇌부를 즉시 해임하라, 셋째 경찰의 무장을 즉시 해제하라, 넷째 경찰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즉시 축출하라.<sup>42)</sup>

39) 봉개 출신으로 김영관이라고도 한다. 3·1투쟁을 주도하여 피검될 때까지 하귀국민학교 교장을 지냈다. 1948년 9월 이후 제주도당 총무부 총책을 맡다가 1949년에 사살되었다.

40) 제주4·3연구소, 앞의 책, 189~190쪽.

41) 濟州道警察局, 앞의 책, 688~689쪽.

42) 「3·1사건 남로당 대책지령서」, 제주4·3연구소, 앞의 책, 161~211쪽.

이와 같은 「투쟁지령문」을 하달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3월 10일까지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3월 10일 정오를 기해 全道的인 파업을 단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3월 10일부터 진행된 총파업에는 행정기관, 학교, 회사, 은행, 교통·통신기관 등 약 160개 단체, 40,000여 명이 참가함으로써 제주도의 행정 기능이 마비되고 연일 불법 폭력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sup>43)</sup> 미군정에서는 파업투쟁의 배후에 남로당이 깊숙이 간여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미6사단 G-2보고서에는 당시의 파업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의 일부 경찰과 군정청 직원들이 3월 13일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은 ‘남로당’이 공작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제주에 주둔하고 있는 제51야전포병대대 분견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제주비행장 활주로에서 약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방화자들은 체포되지 않고 있다.”<sup>44)</sup>

“제주도에서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상당수의 선박회사를 포함한 모든 운송기관의 경영진과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한국인이 소유한 공장뿐 아니라 군정청이 감독하는 공장 등 모든 공장들도 파업에 들어갔다. 모든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도 파업을 벌이고 있다. 군정청의 한국인 직원들 가운데 75%가 파업 중이다.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파업의 근본 원인은 3월 1일 폭동 당시 경찰의 행동에 대한 증오심 때문인 것 같다. 최근 남로당이 이러한 증오심을 주민 선동에 이용하고 있다.”<sup>45)</sup>

위의 미6사단 정보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3월 10일부터 발생한 제주도 총파업은 3·1 폭동 당시 경찰의 발포에 대한 제주도민의 증오심 때문에 발

43) 『獨立新報』1947. 4. 5; 濟州道警察局, 앞의 책, 290쪽.

44)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511, 1947. 3. 13.

45)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512, 1947. 3. 14.

생한 것이지만, 이러한 제주도민의 증오심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남로당의 적극적인 선동과 회유 등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주도한 총파업은 3월 14일 경무부장 趙炳玉의 제주도 방문과 경찰의 강력한 대응 방침에 따라 3월 19일을 기해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파업이 일단 진정되었다.<sup>46)</sup>

그러나 이것으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주도하는 투쟁이 완전하게 종결된 것은 아니었으며, 3·1투쟁 이후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고 '당원확장운동'을 전개하면서 조직확대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조직확대를 기반으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다음해에 '2·7 투쟁'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 4. 南勞黨의 組織擴大와 '2·7總罷業' 指導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3·1투쟁 이후 당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검거됨으로써 조직이 다소 와해되는 국면을 맞게 되지만 1947년 5월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되면서 조직 재건·확대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당시 미군정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에 좌·우익 정당을 똑같이 대우한다는 온건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남로당은 이를 적극 이용하여 '黨員 5倍加運動'을 전개하였다.<sup>47)</sup>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에서도 이 시기를 이용하여 당원확장운동을 전개하였는데, 1948년 초에 제주도의 남로당원 수는 약 6,000~7,000명이었던 것

46)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515, 1947. 3. 17 ; No. 516, 1947. 3. 18 ; No. 517, 1947. 3. 19.

47) 박일원, 『남로당의 조직과 전술』, 세계, 1984, 37쪽.

으로 추정된다. 남로당의 조직확장운동과 관련하여 미군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에 남로당 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6명 이내의 훈련받은 선동가들과 조직체들이 본토에서 파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공산주의 사상과 그 목적을 이해하는 일부 사람들을 포함해 500~700여 명의 동조자들이 6명의 특별 조직체들과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민 6,000~7,000여 명이 남로당에 실제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주민들 가운데 대부분은 남로당의 배경이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 사상을 이해하거나 이런 단체에 가입하려는 열망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sup>48)</sup>

1948년 2월 들어 UN에서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 안’이 상정되고,<sup>49)</sup> 우익세력에 의한 단독정부 수립이 확실시되자 남로당은 이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저지 공작에 나섰다. 이들은 1948년 5월 10일로 확정된 선거를 저지하기 위하여 1948년 2월 7일을 기하여 소위 ‘2·7 구국투쟁’이라고 일컫는 ‘총파업 투쟁’을 지령하였다. 당시 남로당의 주요 수뇌부는 이미 북한 정권에 참여하거나 혹은 북로당 주도하의 당조직에 실질적으로 예속됨으로써 남로당의 사령탑은 서울로부터 평양으로 옮겨져 있었다.<sup>50)</sup> 따라서 2·7투쟁은 평양에서 계획·지령한 것으로 서울의 남로당 중앙은 이를 실천에 옮

48) 「1948년 7월 1일자 브라운대령 보고서」, WEEKA 1948. 7. 17.

49) 1947년 11월 14일 UN총회에서는 “한국 정부수립을 위해 48년 3월 31일까지 남북에서 유엔 감시 아래 선거를 실시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한다”는 미국의 ‘한국 정부수립안’을 통과시켰다(『京郷新聞』, 1948. 1. 9.). 이에 따라 1948년 1월 8일에 8개국 대표로 구성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했다. 그러나 소련측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북을 거절함으로써 유엔 결정에 따른 남북총선거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1948년 2월 26일 UN소총회는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가결하였다(『東亞日報』, 1948. 2. 28).

50) 김집곤, 한국전쟁과 노동당 전략, 1983년, 102쪽. 박헌영은 당시 평양정권의 부수상 겸 의상으로 있었으며 평양정권에 참여하지 못한 남로당 간부는 해수에 집결하여 박헌영의 지령에 의해 대남공작에 임하고 있었다.

겼을 뿐이다.

이들은 민전을 통해 파업과 파괴, 경찰관서에 대한 습격, 그리고 선거방행을 위한 선전과 선동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제1단계로 유엔결의안 반대투쟁에 이어 제2단계인 선거 사건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2·7폭동은 남로당의 조직력과 동원역량을 과시한 사건으로 5·10선거 방해 투쟁의 서곡을 이루었다.<sup>51)</sup> 당시 남로당이 전면에 내세운 투쟁 구호는 다음과 같다.

- 조선의 분할침략계획을 실시하는 UN한국위원단을 반대한다!
-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다!
- 양군 동시철폐로 조선통일민주주의 정부수립을 우리 조선인에게 맡기라!
- 국제제국주의 앞잡이 이승만, 김성수 등 친일반동파를 타도하라!
- 노동자, 사무원을 보호하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제를 즉시 실시하라!
- 노동임금을 배로 올리라!
-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기라!
-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라!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sup>52)</sup>

이러한 남로당 중앙의 지령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다른 지방에 비해 다소 늦은 2월 9일부터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미24군단 G-2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2월 9~11일 밤 공산주의자 17 명이 산발적으로 제주지역에서 폭동과 시위를 주동했다. 이 폭동을 유형별로 보면 6개의 경찰지서 습격, 뼈라 살포, 칼과 곤봉으로 무장한 폭도들의 시위 등이었다. 주목할 점은 많은 폭도들

51) 김점곤, 위의 책, 103~104쪽.

52) 大檢察廳搜查局, 『左翼事件實錄』 第1卷, 1965, 372쪽.

이 소련국가를 불렀다는 사실이다. 보고된 사망자는 없으나 경찰 2명이 심하게 구타당했다. 경찰은 3일 동안 약 290명을 체포했다.”<sup>53)</sup>

제주도에서 발생한 2·7폭동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폭동에 비해 강도는 약했지만, 제주도에서 발생한 이전의 폭동 형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폭력적인 투쟁 형태를 보이는 것이었다.<sup>54)</sup>

‘2·7폭동’은 남로당 투쟁 전술이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전술로 넘어가는 주요한 계기였다. 이 때부터 각 지방에는 ‘野山隊’라는 무장 게릴라 소조가 만들어져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는 이보다 앞서 1947년 8월에 이미 ‘人民解放軍’이라는 무장 게릴라 소조가 결성되어 조직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sup>55)</sup>

한편, 2·7 폭동에서 북조선최고인민회의가 2월 11일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임시헌법초안’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그들이 단순히 ‘단독선거’만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인공’수립에도 그 목표를 두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즉 2·7폭동은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것과 ‘인민공화국’ 수립을 지지하는 ‘양면투쟁’을 동시에 전개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2·7투쟁’은 이후 ‘제주도4·3폭동’과 ‘5·10선거 반대투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sup>56)</sup>

5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781, 1948. 3. 12.

54) ‘2·7폭동’으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48년 2월 7일부터 20일까지 파업 30건, 맹휴 25건, 충돌 55건, 시위 103건, 봉화 204건, 총검거 인원 8,479명이었다. 남로당은 파업으로 각 생산기관을 마비시키는 동시에 교량 파괴, 기관차 파괴, 전신선 절단 등 교통과 통신을 마비시킴으로써 남한의 행정 기능을 교란시켰다(김남식, 앞의 책, 305~307쪽).

55)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Hq. USAFIK, CIC, Weekly Information Bulletin No 16, 1947. 8. 7.

56) 김남식, 앞의 책, 307~308쪽.

## 5. 南勞黨의 武裝計劃 樹立과 4·3事件의 發生

### (1) 南勞黨 中央의 指導員 派遣과 武裝蜂起 計劃樹立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1947년 3·1사건과 3·10총파업 사태이후 조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경찰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태세로 급진화하였다. 이러한 남로당의 노선 전환으로 6월 6일에 구좌면 종달리에서 민청원들로부터 경찰관 3명이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sup>57)</sup> 이에 경찰은 제주도 좌익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활동을 벌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오대진, 김택수 등이 일본으로 도피하고, 민전 제주도 위원회 의장으로 3·1사건을 주도한 안세훈이 목포를 경유해 서울로 탈출하였다가 월북하는 등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제주도를 탈출하였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자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1947년 8월에 조직을 군사부 중심으로 개편하고 위원회 산하에 인민해방군을 창설하였다. 인민해방군 총사령관에 金達三,<sup>58)</sup> 특별경비대장(기동대장)에 李德九<sup>59)</sup>가 임명됨으로써

57) 제주도경찰국, 앞의 책, 694쪽.

58) 본명은 李承晉으로 1923년 대정면 하모리에서 출생하였다. 남로당 중앙위원이었던 姜文錫의 사위이기도 하다. 일본 京都 聖奉中學校를 졸업하고 일본 中央大學 專門部에 진학했으나 중퇴하였다. 해방 후 '10월 대구폭동사건'에 가담하였다. 1946년 말 제주도로 돌아와 남로당 대정면 당 조직책을 지냈다. 3·1사건 이후 도당 조직책이었다가 1948년 도당 군사부책을 맡았다. 4·3발발 후 소위 '인민유격대'의 대장으로 4·3무장투쟁을 주도하였으나 8월 2일 목포를 경유하여 월북하였다. 8월 25일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가하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및 김일성, 허헌 등과 함께 49명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48년 8월 강동정치학원 졸업생 300명을 이끌고 인민유격대 태백산지구(제3병단)사령관이 되어 남하, 1950년 3월까지 유격활동을 지휘하였다. 1950년 3월 22일 정선 반론산전투에서 국군 제8사단 21연대 공비도벌부대에 의해 사살되었다. 현재 평양 인근 애국열사능에 묘소가 있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젊은층의 강경파들이 온건파들을 누르고 위원회를 장악하게 되었다.

인민해방군 사령부 예하에는 25개의 전투부대와 25개의 직속부대, 그리고 각 읍·면 단위로 1~2개의 유격중대와 자위대가 편성되어 있었다. 인민해방군은 한라산에 본부를 설치하고 북제주군 환경면 셋별오름 하단의 들판에 훈련장을 설치하여 무장투쟁을 위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sup>60)</sup>

한편, 1948년 2·7 총파업 사건 이후 남로당 중앙에서는 李斗玉, 전남도 당부에서는 趙昌九, 李昌旭 등을 파견하여 1948년 2월 25일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를 이른바 '救國鬪爭委員會'로 개편하고 위원장에 姜圭燦<sup>61)</sup> 군사부장에 김달삼을 선임하였다.

이로써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무장투쟁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폭동 준비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1948년 8월에 경찰이 게릴라들로부터 압수한 「濟州道人民遊擊隊鬪爭報告書」<sup>62)</sup>에는 당시 남로당의 폭

59) 1920년 조천읍 신촌리에서 태어났다. 오사카 일신상업학교를 졸업하고 1943년 일본 立命館大學 경제학과 4학년 재학중 학병으로 관동군에 소위로 입대했다가 1945년 귀향하여 1946년 조천중학원에서 역사와 지리를 가르쳤다. 1947년 '3·1투쟁'과 관련하여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뒤 한라산으로 입산해 인민유격대의 '3·1지대장'을 맡았다. 김달삼이 8월 21일 해주에서 열리는 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모든 직책을 그에게 맡기고 제주도를 빠져나감으로써 인민유격대 총사령관이 되었다. 1949년 6월 7일 토벌부대에 의해 사살되었다. 현재 평양 인근 애국열사능에 묘가 있다.

60) 고계우, 앞의 책, 26쪽; 高文昇, 『제주사람들의 설움』 신아문화사, 1991, 318쪽. 미CIC도 한국과 일본의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 산간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Hq. USAFIK, CIC, Weekly Information Bulletin No 16, 1947. 8. 7).

61) 1915년 제주읍 출생으로 해방 후 남로당 제주읍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1948년 2월부터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1948년 8월 해주대회에 참석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게릴라 활동을 하다가 사살되었다.

62) 이 투쟁보고서는 1948년 3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상황을 조직, 작전, 투쟁 등으로 구분 총괄적으로 또는 지역별, 날짜별로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으며 국방경비대 제9연대 내의 공산세포와의 연계관계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투쟁보고서는 1948년 8월 25일 해주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제주도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핵심 간부가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南勞黨 人民解放軍 系圖



\* 출처 : 고재우씨(당시 제주경찰서 근무) 소장 자료.

<표 3> 救國鬪爭委員會 系圖



\* 출처 : 「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 고재우씨 소장 자료.

동 준비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48년 3월 중순 남로당 전남도당부에서는 이창욱을 제주도에 지도원으로 파견하여 무장 폭동을 지령하였다.
- 1948년 3월 15일 전남도당부에서 파견한 지도원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첫째 당의 조직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 둘째 단선단정반대 구국투쟁의 방법으로 전 도민을 쫓아내 무장폭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그 준비 및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준비기간은 1948년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로 한다.
- 島常任, 특히 鬪爭委 멤버로 軍事委員會를 조직하고 투쟁에 필요한 200명 예정의 자위대를 조직하며 보급과 무기준비 및 선전사업 강화 등 책임을 분담하여 준비하기로 하였다.
- 준비기간인 3월 25일을 넘긴 3월 28일 재차 회합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병력은 조직대상 13면(추자면까지 포함) 중 구좌, 성산, 서귀안덕, 추자 등 5개 면을 제외한 제주, 조천, 애월, 한림, 대정, 중문, 남원, 표선 등 8개 면에서 유격대 100명, 자위대 200명, 島軍事委 직속 特警隊 20명 등 함께 320명의 병력이 편성 완료되었는데 조직 체계는 島鬪爭委 軍事部 밑에 島軍事委員會를 두고 위원장, 총사령관, 부사령관이 있으며 各面鬪爭委 군사부 밑에는 各面軍事委員會를 두어 위원장, 총사령, 참모가 있어서 자위대 및 유격대를 통솔 지휘하는데 인원 편제는 10인을 1개 소대, 2개 소대를 1개 중대, 2개 중대를 1개 대대로 편성하였다.
- 무기는 구구식소총 27정, 권총 3정, 수류탄 25발, 연막탄 7발, 기타 죽창으로 준비가 완료되었다.
- 3월 20일경에는 한림면 새별오름 공동묘지에서 전투원 67명에 대한 합숙훈련을 실시하였다.
- 거사일시는 4월 3일 오전 2시~4시 사이로 하며 거사대상과 책임분담은 濟州警察監察廳(현 제주경찰청)과 第1區署(현 제주경찰서)는 國警(國防警備隊)이 담당 분쇄하고 도내 14개 경찰지서는 유격대 및 자위대 400명을 배치 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國警 프락치에게는 무장반격에

동원 가능한 병력 수를 사전에 문의한 결과 800명 중 400명은 확실성이 있고 200명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반동은 주로 장교급으로서 하사관 까지 합쳐도 18명이므로 이들만 숙청하면 문제없으니 병력 동원에 필요한 차량 5대만 보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만약 차량배치가 안될 때에는 도보로라도 습격에 가담하겠다는 연락이 있었으므로 즉시 국경공작원인 島常委靑責을 파견 감찰청 및 제1구서 습격 지령과 함께 차량 5대를 보내는 외에 거점 분쇄 연락병으로 學生特務員 20명을 제주읍내에 침투시켰다.

이와 같이 이들이 직접 작성한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 의하면, 제주 4·3사건은 전남도당부 지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무장병력의 편성, 임무, 거사일시 및 시간 등 사전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일으킨 폭동이었다. 당시 남로당 지하총책을 맡았던 박갑동도 4·3사건이 남로당 중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sup>63)</sup>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에 대한 ‘적극적 보이코트’ 지령에 따라 남로당이 대대적인 무장폭동 장소로 택한 곳이 제주도다. 남로당이 굳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를 택한 이유는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해방 직후부터 공산당의 조직활동이 가장 활발했고, 따라서 그들의 선전과 조직활동 등으로 도민의 사상이 자못 붉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곳의 경찰은 사면초가의 입장에 몰려 형세가 불리했고 치안은 위기에 몰려 크고 작은 소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 앞서도

63) 박갑동, 『박현영』, 인간사, 1988, 198~199쪽. 박갑동은 남로당 핵심 인물들이 월북한 후 남한내에서 지하활동을 주도하였던 거물급 공산주의자였다. 4·3사건과 남로당 중앙과의 관계 문제는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의 저자인 김봉현이 1988년 在日文藝誌 『民壽』와의 인터뷰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다. 김봉현은 4·3사건 당시 남로당 중앙에서 천검산이라는 가명을 쓰는 오르그가 파견되어 무장투쟁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 천검산은 군사이론에 탁월했다고 한다(고문승, 『제주사람들의 설움』, 387쪽).

말했듯 47년 3월 1일 이른바 3·1 폭동 때도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주도로 대대적인 군중폭동을 일으켜 중앙당으로부터 조직활동에 대해 인정을 받고 있었다.

내가 알기론 현지의 남로당은 2·7투쟁을 전후해서 한라산 여러 봉우리의 밀림마다 아지트를 만들어 온갖 방법을 되풀이 해왔다고 들었다. 그러던 중 중앙당의 폭동지령이 떨어졌다. 아마도 그 지령은 3월 중순쯤에 현지의 무장행동대 두목 김달삼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

... 당시 중앙당에서는 이 사건이 터질 무렵 당군사부 책임자 李重業과 군내의 프락치 책임자 李在福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소위 현지 집중지도로써 군사활동의 확대를 기도했다. 또 폭동의 두목 김달삼의 장인이며 중앙당선 전부장 姜文錫을 정책 및 조직지도 책임자로 선정하여 현지에 보냈었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제주4·3사건은 남로당 중앙과 전남도당부에서 지도원을 파견하고,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주관하에 폭동에 관한 사전 계획과 준비 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2) 濟州4·3事件의 發生과 人民解放軍의 活動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기하여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한라산 정상과 주요고지에 일제히 봉화를 올리는 것을 신호로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도내 26개 경찰지서 습격대상 중 외도, 구엄, 애원, 한림, 대정, 남원, 성산, 세화, 함덕, 조천, 삼양, 화북 등 12개 경찰지서에 유격대 및 자위대 350명을 투입하여 계획대로 습격을 감행하였다. 이들 무장폭도들은 좌익세력과 대결하던 경찰관,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독립촉성국민회 등 우익인사들이 포함된 숙청대상자 명단, 즉 흔히 말하는 殺生簿를 가지고 사무실을 습격하여 미처 피신하지 못한 청년당원과 그 가족들을 학살함으로써 제주도를 유혈의 참화 속으로 몰고 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회질서가 무너진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고, 민심은 극도로 동요되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태로 빠져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폭도들은 5·10 총선거를 무력으로 저지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지능적인 방해공작과 살상을 자행함으로써 선거등록사무가 중단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sup>64)</sup>

폭동의 주모자였던 김달삼이 1948년 8월에 해주에서 개최된 남조선인민대표자 대회에서 행한 연설에는 당시 폭도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행동했는가가 잘 나타나 있다.<sup>65)</sup>

- 전투: 지서 습격회수 31회, 야외 집전회수 15회 이상, 계 45회 이상
- 숙청: 경관 100명 이상, 한민당·독립촉성국민회·서북청년단·대동청년단 기타 반동 400명 이상, 계 500명 이상
- 부상: 경관 30명 이상, 반동 40명 이상, 계 70명 이상
- 지서소각: 5개 반
- 지서파괴: 5개
- 투항: 경관 5명, 반동 2,000명 이상
- 포로: 30명 이상
- 피검자 탈환: 80명 이상
- 전선절단: 893개소
- 도로파괴: 79개소
- 노획: 소총·실탄·쌀·의복·철갑·군도·창 등 다수

이와 같이 김달삼이 이끄는 무장대는 45회 이상의 지서습격 및 야외전투를 통해 57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각종 시설물을 파괴하는 한편, 다수의 무기를 탈취하는 등 제주도 공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무장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였다. 이들 무장대는 자신들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선전하기

64) 제주도청, 『제주도지』, 1993, 85~86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미정규전사』, 1988, 29~30쪽.

65) NARA RG-242 북한노획문서, 「김달삼의 해주 남조선인민대표자 대회 연설문」. 남조선인민대표자 대회와 김달삼의 연설에 관해서는 다음 장을 참조.

위해 각 부락마다 '투쟁격문'을 붙이고 주민들을 선동하였다. 1948년 4월 10일자 인민해방군 제5연대 명의로 「포고문」에는 당시 인민해방군이 지향했던 투쟁목적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우리 人民解放軍은 人民의 權利와 自由를 完全히 保障하고 人民의 意思를 代表하는 人民의 나라를 創建하기 爲하여 單選單政을 죽임으로써 反對하고 賣國의인 極惡反動을 完全히 肅清함으로써 UN朝鮮委員團을 國外로 모라내고 兩軍을 同時撤退시켜 外國의 干涉없는 南北統一의 自主的 民主主義 政權인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樹立될 때까지 鬪爭한다.

- 一. 人民解放軍의 目的 達成에 全的으로 反抗 하고 또 反抗 할여는 極惡反動 分子는 嚴罰에 處함.
- 一. 人民解放軍의 活動을 妨害하기 爲하여 賣國의인 單選單政을 協力하고 또 極惡反動을 協力하는 分子는 反動과 같이 取扱함.
- 一. 親日派 民族反逆 徒輩의 謀略에 빠진 良心의인 警察官, 大靑員은 急速히 反省하면 生命과 財産을 絶對的으로 保障함.
- 一. 全人民은 人民의 利益을 代表하는 人民解放軍을 積極 協力하라.

右와 如히 全人民에게 布告함

四二八一年 四月十日 人民解放軍 第五聯隊<sup>66)</sup>

위의 「포고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인민해방군은 자신들이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만약 협력하지 않는 주민은 ‘반동분자로 숙청 대상이 된다고 주민들을 협박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무장투쟁 목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립’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sup>67)</sup>

66) 1948. 4. 21. 경찰이 수거한 인민해방군 포고령 뼈라.

67) 이운방씨는 4·3사건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4·3사건) 주도자는 빨갱이로 봐야지 최종목적은 공산주의니까 … 중략 … 내가 비판하려는 것은 4·3은 시기가 아니었

이를 통해 볼 때, 4·3사건은 '5·10 총선거 반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립을 목표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산하 인민해방군이 사전 치밀한 계획하에 일부 제주도민을 선동하여 조직적으로 일으킨 공산폭동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 6. 南勞黨의 '5·10 總選舉 反對鬭爭' 指導

1947년 11월에 유엔은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한반도에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유엔한국위원단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1948년 1월 북한정권은 유엔한국위원단 입북을 거부하였다. 당시 북한은 독자적인 정권수립을 거의 완료한 상태였으며, 남한에 대해서는 남로당이 주도하는 무장투쟁을 통해 공산화를 피하고자 계획하고 있었다.<sup>68)</sup>

공식적으로 북한정권이 수립된 것은 1948년 9월 9일이지만, 소련의 지원을 받아 1948년 초에 이미 정부조직이 갖추어진 상태였다. 이는 아래에 열거하는 북한정권의 수립과정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 1945. 10. 10~ 13. 조선공산당 서북5도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 개최, 『민주기지노선』 주창,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책임자로 김일성 선임
- 1945. 10. 28. 북조선 5도행정국 정식발족 및 중앙에 행정 20국 발족

다는 것이요. 레닌이 '시기가 아닌 시기에 폭동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대가없는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그것은 계급적 죄악이다'라고 예기한 것처럼 (4·3의) 희생이 너무 큰 원인이 우리 내부(남로당)에도 있었던거지'(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해준다』 한울 1989, 198쪽.

68)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권, 1967, 99쪽. 한국의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남북총선거를 소련이 거부하자 UN은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결정하였다.

KCS I

- 1945. 12. 17.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3차회의에서 책임비서로 김일성  
선임
- 1946. 2. 8. 임시 인민위원회가 수립되고 위원장에 김일성이 선임됨
- 1946. 3. 23. 김일성 20 개 정치강령 발표
- 1946. 7. 22.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민전) 결성
- 1946. 8. 28.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 개최
- 1946. 11. 3. 인민위원회선거, 총 3,459명의 인민위원 당선·공포
- 1947. 2. 21. 제1차 북조선인민회의개최(입법부 발족)
- 1947. 2. 22. 북조선인민회의에서 '북조선인민위원회' 조직 승인(행정부  
발족)
- 1947. 2. 22. 북조선검찰소장 임명 및 인민재판소장 선거 실시(사법부  
발족)
- 1948. 2. 8. 조선인민군 창설<sup>69)</sup>

이와 같이 북한은 1947년 2월 22일까지 입법·사법·행정기구가 모두 갖추어져 실질적으로 정권수립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나아가 그 이듬해인 1948년 2월 8 일에는 국가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까지 창설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북한은 '민주기지도선'에 입각한 혁명전략하에서 무력으로 남한에 대한 공산화를 피하고자 하였다. 당시 남한의 좌우익 대결과 사회적 혼란은 이러한 계획 실행에 대단히 좋은 기회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폭동과 반란을 지령하고 강동정치학원에서 정치교육과 유격교육을 받은 2,300여 명의 인민유격대를 남파시켜 후방교란과 남로당 지하조직을 적극 지원하게 하였다.<sup>70)</sup>

69)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19~1924쪽.

70) 육군본부, 『공비연혁』, 1971, 227~231 쪽

인민유격대의 성분은 남한에서 월북한 남로당의 핵심요원들로서 제주4·3폭동사건과 여·순반란사건이 남한에서 발생하자 이들 공산분자들을 지원하고 남한내 공산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 1948. 11. 14. 180명을 양양을 출발 38°선을 월경, 오대산지구로 침투, 오대산맥을 따라 태기산 부근까지 침투하였다. 그후 1949년에는 8차에 걸쳐 1,500여 명

КСИ

---

을 남파시켰고, 1950. 3. 28. 700명의 인민유격대를 남한에 침투시킴으로써 남한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군의 전투력이 후방에 집중되어 전방경계가 미약하게 되었다.



5·10선거가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합법적인 정부가 남한에 수립될 경우, 북한과 남로당의 혁명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과 남로당은 국민투표에 의한 합법적인 정부가 남한에 수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하는 급박한 처지에 놓여있었다.

남로당은 “남북통일”과 “민족자결”이라는 미명하에 남북협상을 정당화시키는 정치공작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비합법적인 폭력수단으로써 무장투쟁까지를 병행시키는 폭넓은 복합투쟁방법을 취하였다.

그들은 이 두 개의 상이한 투쟁형태를 배합시킴으로써 양자의 상승효과를 노렸던 것이다. 즉 정치공작에 있어서는 통일명분과 자결주의라는 민족주의적 이성과 감정에 호소하는 공개적 합법투쟁 수단을 취하는 한편 은밀히 계획되고 실행된 비합법적이고 무자비한 폭력투쟁을 병행하였던 것이다.

남로당은 5·10선거투쟁에 있어서 「미군 철수」와 「유엔 한국위원단의 활동 중지」를 요구하면서 선거사무소 등 공공시설과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방화하였으며, 선거관리원, 경찰관, 우익인사의 살해, 통신선 절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를 방해하였다.<sup>71)</sup>

5·10선거 반대투쟁 중 가장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제주도이다. 이미 폭동이 제주도 전역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5·10선거 당일에 보다 철저한 선거방해 공작을 전개하였다. 남로당이 주동이 된 5·10선거 반대투쟁은 제주도의 3개 선거구중 2개 선거구가 무효화 될 정도로 폭력적인 방해공작이 극심하였다. 다음의 증언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5·10선거 방해공작을 얼마나 철저하게 행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48년 5·10선거 일주일 전쯤으로 기억된다. 선거방해 목적으로 좌익계 청년들이 동네 사람들을 산으로 올라가도록 위협했다. 이의 일환으로 공비

71) 김점곤, 앞의 책, 111~113쪽.

들은 4·3사건 이후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익계 인사들을 납치 살해하였다. 음력 4월 3일 우리마을 대동청년단장 정방옥(당시 31세)씨와 단원 김용조(당시 26세)씨를 강제 납치, 현재 신제주 서남쪽 '생이오름'부근에서 팔과 다리에 말뚝을 박아서 생매장 해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공비들의 만행은 계속되어 3일 후 선거관리위원장 김해만(당시 58세), 대동청년단원 김택훈(당시 27세), 부친 김상옥씨를 납치하여 살해하였다.<sup>72)</sup>

또한 4월 20일에는 대정면 동일리(東日里) 선거관리위원장 강일황(姜日況)이 자가에서 피살되었으며, 4월 28일에는 화북3구 선거관리위원장 오두현(吳斗鉉)이 피살되었고, 그의 시체는 부락에서 2km 떨어진 소나무 숲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제주읍 도평마을에서는 이 마을 선거관리위원장 이원백(李元白, 57세)씨가 5월 1일 새벽에 자기 집에서 살해되었으며 5월 5일에는 화북리(禾北里) 선거관리위원장 임형권(林亨權, 61세)씨가 죽창으로 무장한 5명의 폭도들에게 살해되었다.<sup>73)</sup>

이와 같이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그들의 5·10선거 방해공작은 비합법적이고 무자비한 폭력투쟁으로 변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의 신변을 위협을 하였으며, 이때문에 선거관리위원들은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신하거나 아예 사표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남로당이 주체가 된 5·10선거 반대투쟁은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통일을 위해 5·10총선을 반대했다”는 주장은 적반하장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남로당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5·10선거 반대투쟁은 우리민족을 우롱하는 상투적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수법이며, 선거의 기본권을 침탈한 주권행사의 방해책동이라고 볼 수 있다.

72) 朴瑞東의 증언. 박서동은 1948년 5·10 총선 당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선거방해를 위한 각종 만행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선거를 못하게 산으로 끌고가 3일간 공산주의사상 교육을 강제로 받게 했다고 토로한다.

73) 조남현, 제주 4·3사건의 쟁점과 진실, 1993년, 148~149쪽.

## 7. 南勞黨의 軍內 浸透와 聯隊長 暗殺

제주 4·3사건 당시 폭도들의 활동이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중 하나는 제주 9연대 내에 침투한 공산세포들의 지하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해방 후 공산당은 좌익의 무장력으로 조직된 '朝鮮國軍準備隊'를 장차 인민공화국 정규군으로 전환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1945년 11월 13일 미군정청내에 國防司司令部가 설치되고 1946년 1월 15일 동사령부 예하에 國防警備隊가 창설되었다. 이에 따라 군정청은 1946년 1월 21일부로 모든 사설단체를 해산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군준비대'는 해체되었다. 이렇게 되자 남로당에서는 '국방경비대'에 침투공작을 시작하였다.

당시 경비대는 모병시 신원조사가 없었으므로 좌익청년들이 얼마든지 잠입할 수 있었으며, 경비대 사병들은 대부분 빈농출신으로 해방 후 득세했던 좌익세력에 가담했던 층이 많았다. 또한 이들 중에는 좌익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쫓겨 경비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경비대 사병중에는 경찰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았는데, 남로당에서는 경비대와 경찰간 反目對立을 적극 활용하였다.

한편, 군장교에 대한 침투공작은 주로 '경비사관학교'내에 이미 침투해 있거나 포섭된 조직망을 통하여 남로당 추천자를 입교시키는 경우와 임관된 장교를 통하여 知人들을 포섭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제주도 주둔 제9연대에 침투한 대표적인 좌익 인물로는 중대장 文相吉 중위, 대대장 吳一均 소령, 그리고 高升玉 상사 등이었다. 이들 중 장교는 남로당 중앙에서 직접 지도를 받았으며, 하사관과 사병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지도를 받았다. 따라서 이들 조직은 점조직 형태를 띠면서 같은 남로당원이더라도 군내부에서는 서로를 알지 못하였다.<sup>74)</sup>

74) 김남식, 『실록 남로당』(하), 신현실사, 1975, 449쪽. 김남식씨는 원래 남로당 충남도당

K C I

---

주요간부로서 활동하다가 전향하여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국정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남로당연구』 등 남로당에 관한 많은 저서를 남겼다.

당시 남로당 중앙에서는 1948년 2월 25일 군사부장 李重業과 군사프락치 李在福을, 그리고 남로당 전남도당에서는 조창구와 이창욱을 제주도에 파견하여 중앙의 지령을 전달하고 제주도당을 '구국투쟁위원회'로 개편하는 한편, 군사부장에 김달삼을 임명하고 폭력투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sup>75)</sup>

제주4·3사건 당시 제9연대내에 침투한 문상길 중위와 하사관들은 김달삼이 이끄는 인민해방군과 모의하여 사건 발발 당일 제주감찰청과 제주경찰서를 습격하도록 계획되었으나 내부사정으로 인해 출동하지 못하였다.<sup>76)</sup>

제9연대는 4월 하순 군정장관의 진압작전 지시가 내려지기 전까지 진압작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작전에 참여한 이후에도 군내에 침투한 공산세포들이 작전계획을 사전에 인민해방군에게 누설함으로써 작전을 방해하는 등 인민해방군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sup>77)</sup>

한편 국방경비대 총사령부에서는 4월 10일 부산에 주둔중인 제5연대 제2대대를 공수하여 제9연대에 배속시켰다. 그러나 대대장 오일균 소령은 대대장병의 훈련상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토벌작전을 보류한 채 경찰과 서북청년단 행동을 비난하면서 주민들의 공비출현 신고가 들어와도 이를 묵살하고 출동하지 않았다. 더구나 오일균은 제9연대내 좌익세포 문상길과 은밀히 회합하고 남로당 군사부총책 김달삼과도 내통하면서 군내부의 좌익세포조직을 확대해 나갔다.<sup>78)</sup> 그리고 제9연대내 남로당 세포조직은 무기와 탄약을 인민해방군에 빼내어 주고 1개 중대를 탈영시켜 인민해방군에 합류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9연대장은 오일균대대장의 계략에 말려들어 인민해방

75) 고재우, 앞의 책, 30쪽.

76) 國警(國防警備隊) 불참 사유에 대해서는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문혀진 4·3의 진상』, 1995, 13~14쪽 참조.

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1968, 439 쪽

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30 쪽

오일균은 군사영어학교 출신으로 경비사관학교 근무 당시 생도대장을 역임한 장교로 일찍이 남로당에 가입하여 좌익활동을 했던 자이다.

군 사령관 김달삼과 비밀협상을 가졌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되고 공비들과 불법적인 협상사실이 상부에 보고되어 연대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되었으며, 이에 대한 문책으로 정보장교 이윤락 중위가 파면되었다.<sup>79)</sup>

경비대사령부는 1948년 5월 6일 후임 연대장으로 박진경 중령을 임명하는 한편, 5월 초에 수원에서 창설된 제11연대를 5월 15일부로 제주도로 이동시켜 제9연대와 제5연대 2대대를 배속시켰다.<sup>80)</sup>

제11연대 초대 연대장으로 부임한 박진경 연대장은 제1 단계 작전으로 산에 있는 주민과 폭도를 분리하기 위하여 선무공작을 실시하였고, 제2단계 작전으로 在山공비의 소탕작전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박진경 연대장은 부임한지 약 1개월만인 6월 18일 문상길, 손선호 등 군내에 침투한 남로당 세포들에 의해 암살되었다.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문상길, 오일균 등 군내부에 침투한 남로당 세력이 일망타진되었다.<sup>81)</sup>

이와 같이 남로당의 군내부 침투공작에 의해 지휘관은 남로당 계열의 중대장, 대대장 및 참모들에게 둘러쌓여 작전임무수행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였으며, 끝내는 남로당 공산세포들에게 살해당하는 비운이 발생하였다.

남로당의 조직적인 군내부 침투공작은 제주4·3사건에서도 그들의 불법적인 무력투쟁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나아가 '여·순 10·19 사건'이라는 군 반란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7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54쪽.

김익열은 김달삼과 한번 만났다고 「4·3의 진실」에 기술하였으나 남로당 핵심간부가 쓴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는 2회에 걸쳐 협상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음. 또한 제9연대 2대 연대장인 이치업씨는 김익열씨가 부연대장으로 있을 때 매주 토요일마다 학병 동기생 출신인 김달삼과 만났다고 증언하였다 (이치업 장군 증언, 2001. 4. 23).

8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440쪽.

81) 김남식·이정식·한홍구 공저, 『한국현대사자료총서』 제7권, 1988, 618쪽.

## 8. 海州 南朝鮮人民代表者大會와 金達三의 演說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는 1948년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해주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의 개최 목적은 북한과 남로당이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 국회의원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회 개최에 앞서 남로당은 민전을 앞장세워 '선거지도위원회'를 조직하고 인민대표자대회에 참가할 각 지방대표들을 선출하여 육로와 해로를 통해 월북시켰다. 또한 남로당 중앙은 7월 15일부터 산하단체에 이들 대표들을 지지한다는 '연관장운동'을 전개시켰다.<sup>82)</sup>

남로당 산하단체인 민전에서는 해주 인민대표자대회에 파견할 대표 1,080명을 선정하고 7월 말부터 8월 초에 이들을 월북시켰다. 4·3사건 당시 게릴라로 사건에 직접 참가했던 金奉鉉에 의하면, 당시 제주도 대표로는 安世勳, 金達三, 姜圭燦, 李貞淑, 高珍姬, 문동용 등 6명이 참가하였다고 한다.<sup>83)</sup> 이들은 배편을 이용하여 목포를 거쳐 해주대회에 참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48년 8월 10일자 미24군단 G-2 보고서에는 "8월 2일 공산 분자 5명이 배를 타고 목포로 나갔다. 이들은 북한의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평양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sup>84)</sup>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는 대표 1,080명 중 1,020명이 참가하여 6일간 해주에 있는 '인민회당'에서 열렸다. 8월 21일 첫날 회의에서는 박헌영의 개회선언, 민주독립당 위원장 홍명희의 개회사, 주석단 및 서기국 선거, 박헌

82) 김남식, 앞의 책, 342쪽.

83) 金奉鉉·金民柱, 『濟州島人民들의 4·3武裝鬪爭史』 1963, 文友社, 154쪽.

84) Hq. H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07, 1948. 8. 10. 해주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한 6명의 제주도 대표 중 5명만이 제주도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안세훈은 1947년 3·1기념 투쟁을 주도하였다가 이후 서울로 도피한 후 그곳에서 월북하였다. 한편, 현재까지 문동용의 행적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으며, 가명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영의 '조선최고인민회의 남조선대의원선거를 위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대표 선거 총결에 대하여'라는 보고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박헌영은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대표 선거 총결 보고'에서 4·3과 관련하여 "단선반대투쟁에 가장 빛나는 실례는 제주도인민들의 전인민적 결기와 전제주도 선거의 완전 파탄이다. 제주도의 무장봉기는 수십배나 되는 적의 포위하에서 4개월을 계속하되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더욱 확대의 일로를 밟고 있으니 이것은 일반적 남조선인민들의 구국투쟁의 성격을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선동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sup>85)</sup>

또한 첫날 대회에서는 주석단 선거가 있었는데, 박헌영, 홍명희, 이영, 김원봉, 허헌, 이승엽 등 당시 내로라 하는 좌익계 인물 34명과 더불어 20대 중반의 김달삼이 주석단에 피선되었다.<sup>86)</sup>

8월 22일~24일에는 남조선 각지에서 보내온 축문 낭독, 북조선 노동자들의 축하 연설, 학생들 축하 연설, 북조선 각지에서 보내온 축전 낭독, 최승희 무용연구소 공연, 북조선 농민대표 축하 연설, 박헌영의 토론에 대한 결론보고,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대표심사위원회보고, 북조선 여성 및 문화인대표 축하 연설, 평양 혁명자유가족학원 학생대표 축하 연설, 박헌영 등 360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입후보자 추천 등으로 진행되었다.

대회 5일째인 8월 25일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입후보자들의 활동보고와 토론이 있고 난 후에 투표가 진행되었다. 이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제주도 출신 안세훈, 김달삼, 고진희, 강규찬, 이정숙, 문동용 등이 선출되었으며, 김달삼의 장인인 姜文錫도 포함되었다.<sup>87)</sup> 활동보고에서는 4·3사건의 주모자 김달삼이 19명의 보고자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연단에 올랐다.

당시 남로당은 앞으로 수립될 이른바 인민공화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

85) 「南朝鮮最高人民會議 南朝鮮代議員選舉를 爲한 南朝鮮人民代表者大會代表 選舉總結에 대하여」(朴憲永).

86) 「被選된 主席團名單」.

87) 「南朝鮮人民代表者大會에서 當選된 朝鮮最高人民會議 代議員名單」.

지하고자 대회의 모든 문건 및 연설에서 박헌영을 영웅시하고 이상화하는데 집중하였다. 김달삼의 연설 또한 박헌영의 찬양과 전면적 지지를 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김달삼 연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88)</sup>

- 3월 4일 조천면에 사는 김용철이라는 12세밖에 안된 중학생을 잡아다가 반동살인 경찰은 빨갱이라고 서내에서 구타 고문한 후 학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김용철동무는 최후의 순간까지 '박헌영선생 절대 지지와 '인민공화국 사수'를 웨치면서 그놈들에게 항거하였던 것입니다
- 4월 3일 오전 2시를 기하여 '인민군' 즉 '산사람'들은 총궐기했습니다. 이날 지서 12개 소를 일제히 습격하여 악질 경관 10명과 11명의 테로단·서청원 그리고 악질반동 10명이 인민군의 애국정신에 불타는 정의의 총칼 앞에 제거되었으며, ... 제주도 무장반격투쟁은 계속 발전 강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적에 대하여 결정적인 치명상을 주었으니 이는 다음의 숫자적 종합 성과에 여실히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서 습격회수 31회, 야외집회회수 15회 이상, 경관 100명 이상 숙청, 한민·독촉·서청·대청 기타반동 400명 이상 숙청, 지서 소각 5개 반, 지서 파괴 5개, 전선 절단 893개소, 도로파괴 79개소, 소총·탄환 등 무기 다수를 로획하였습니다.
- 여러분! 조선최고인민회의 남조선 대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완수합니다. ... 우리 조국의 통일과 독립국가 건설의 물질적 토대를 이루는 북조선 민주개혁을 남조선에서 하루속히 실시하도록 우리는 용감히 싸웁시다. 민주조선 완전자주독립 만세! 우리 조국의 해방군인 위대한 쏘련군과 그의 천재적 령도자 스탈린대원수 만세!

8월 26일 인민대표자대회 마지막 날에는 「모스크바 소련내각수상 스탈린 대원수 귀하」, 「북조선인민위원회 김일성위원장에게 드리는 멧세지」 등을 낭독하고 허헌의 「폐회사」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모두 마쳤다.

88) 「김달삼의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 연설문」.

이 대회 성격은 다음과 같은 구호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자유와 민주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귀중한 스승인 당신의 만수무강을 축복하나다.”<sup>89)</sup> 여기서 ‘당신’이란 말할 것도 없이 소련의 스탈린을 지칭한다. 또한 메시지 마지막 문구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진정한 인민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와 그의 지도자이며 우리 민족의 민족적 영웅인 김일성 장군 만세!” 등을 사용하고 있다.<sup>90)</sup>

해주대회 이후 제주4·3사건 주모자 김달삼은 9월 2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한 이른바 ‘조선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김일성·허헌 등과 함께 49명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강규찬은 최고인민회의의 분과위원회의 하나인 법제위원회에서 허헌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이후 김달삼은 북한에 머물며 강동정치학원에서 빨치산 간부교육을 받았다. 강동정치학원 원장을 역임한 朴秉律은 “강동정치학원에서 빨치산 지도자인 이현상, 제주도 빨치산 지도자 김달삼 등을 교육시켰다”고 말했다.<sup>91)</sup> 김달삼은 1948년 8월 강동정치학원 졸업생 300 명을 이끌고 인민유격대 태백산지구(제3병단) 사령관이 되어 남파되었다. 그는 1950년 3월까지 유격 활동을 지휘하다가 3월 22일 정선 반론산전투에서 사살되었다.<sup>92)</sup>

## 9. 결 론

미군정기 남한의 정치상황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우익정파와 소련을 배

89) 『모스크바 蘇聯內閣首相 스탈린大元帥 貴下』.

90) 『北朝鮮人民委員會 金日成委員長에게 드리는 메시지』.

91) 『중앙일보』, 1990. 6. 23.

92) 『연합신문』, 1950. 3. 30.

경으로 한 좌익정파간의 정치투쟁이라는 이념적 대결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남한내 좌·우익간의 정치투쟁의 핵심은 국가건설에 있어서 소련 내지 북한을 배경으로 한 좌익세력이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려고 한데 반하여 미국을 배경으로 한 우익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려고 한 데 있었으며, 이 정치투쟁은 한국에 대한 강대국의 신탁통치문제와 남한 단독정부수립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다.<sup>93)</sup>

1946년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1946. 3. 20~5. 8)의 결렬은 좌·우익 갈등을 격화시키는 중요한 계기였다. 미소공위의 결렬은 미소공위를 통해 자신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인민위원회를 토대로 공산정부를 수립하고자 계획했던 조선공산당에게 새로운 투쟁방향을 설정하게 하였다. 1946년 7월에 조선공산당은 '정당방위의 역공세'라는 소위 '신전술'<sup>94)</sup>을 채택하고 '9월 총파업'과 '10월 대구폭동'을 주도하였다.

한편, 미군정은 제1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후 공위 개시 이전의 온건정책을 버리고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강경정책을 취하였다. 이러한 강경정책은 미국의 '공산주의 봉쇄정책'의 일환이었으며, 한반도는 이러한 봉쇄정책의 실험무대였다.<sup>95)</sup> 이는 한반도가 전세계적으로 미소간의 대립이 첨예한 지역 중의 하나이고, 좌익이 우익보다 월등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군정은 1946년 9월 7일 박헌영을 비

93) 해방 후 남한의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申相俊, 『濟州島 4·3事件』(上卷), 韓國福祉行政研究所, 2000, 138~391쪽 참조.

94) 신전술의 주요내용은 ① 지금까지 협조, 합작노선을 진보적으로 전환 ② 극동에서 中共黨과 日本共産黨들과 연계하여 反美 운동 적극화 ③ 북조선과 같은 개혁 요구 ④ 미군정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폭로하고 투쟁을 적극적 공세로 전개 ⑤ 정권을 군정에서 인민위원회로 넘기는 투쟁전개 ⑥ 회생을 각오하고 투쟁할 것 등이었다(朴翹遠, 『南勞黨總批判』, 서울, 1947, 46쪽).

95) 미국의 '공산주의 봉쇄정책'이 가시화된 것은 1947년 3월 12일 미 대통령 트루만이 소위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하면서부터였다. 이 정책의 기본 개념은 '공산주의 팽창을 섬멸한다'는 것으로 기존에 미소간에 유지되었던 협력관계의 청산과 대소 강경정책의 표방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한반도의 경우 미국의 '봉쇄정책'이 본격적으로 구현되기 전에 이미 1946년 말부터 '공산주의 섬멸정책'이 실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릇한 좌익계 인사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고 공산계열의 정당활동을 금지시켰다.

1947년 들어 공산주의자들이 점차 강력한 폭력투쟁으로 전술을 전환하면서 남한의 좌·우익간의 정치대결은 극히 심화되고 폭력화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3·1투쟁과 같이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反美·반이승만 투쟁을 전개하면서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정부를 수립하고자 획책하였다.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반미·반이승만 투쟁은 서울로부터 450km나 떨어진 孤島 제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해방 이후 제주도의 행정은 미군정이 제기능을 수행하기 전까지 인민위원회가 담당하였다. 인민위원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대부분 일제하 사회주의 운동을 경험한 사람들로 조선공산당 제주도위원회의 당원들이었다.

당시 제주도의 유일한 좌익 정당이었던 조선공산당은 1946년 12월 남로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산하조직으로 민전과 민청, 그리고 부녀동맹 등을 결성하면서 제주도내의 좌파 세력 확대를 주도하였다.

이들 좌파 세력은 미군정이 점차 행정조직을 갖추고 기능을 발휘하자 미군정과 행정권의 주체 문제를 놓고 잦은 마찰을 빚어 제주 사회는 서서히 정치적인 불안과 긴장에 휩싸이게 되었다.

1947년에 발생한 '3·1사건'은 이러한 마찰이 가시화된 대표적인 사례였다. 민간인 6명이 죽고 '3·10 총파업'으로 확대되면서 흔히 4·3사건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는 이 사건은 「남로당 투쟁지령문」이 말해주듯이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한 사건이었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3·1투쟁 당시 경찰에 의한 발포사건과 일부 제주도민들의 불만을 '3·10총파업'과 이듬해인 1948년 '2·7투쟁'으로 확대시켜 나갔으며, 결국에는 4월 3일 제주도 전역에서 무장폭동을 감행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폭동사건에는 언제나 남로당이 배후에 있었으며, 철저한 사전계획이 마련되었다.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는 1947년 8월에 이미 인민해방군이라는 무장계렬라 소조가 결성되고 남로당 중앙에서

지도원이 파견되는 등 제주도를 폭력으로 장악하려는 남로당의 기도가 계획적으로 준비되고 있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폭동 주모자 중 핵심인물인 김달삼이 해주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행한 연설 내용은 이들이 5·10선거를 방해하여 남한의 합법적인 정부수립을 방해하고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 무장투쟁을 벌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 정부수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이와는 반대로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하려는 남로당 투쟁전략과 전술 변화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남로당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인민해방군'이라는 무장세력을 양성하는 한편, 군 내부에 공산세포를 침투시켜 폭동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결국 남로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을 선동하여 5·10선거를 파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제주도를 공산화시키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